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배경 및 정책대안

김경근(고려대학교)

I. 서론

교육격차 해소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회에서건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뛰어나고 유수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계층 간 교육격차는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정도와 추세는 사회별로 다를 수 있는바, 상황이 심각하다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갈수록 심화하여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위한 통로로 기능하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해당 사회는 저소득층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한국 사회에 수저계급론이 대두한 것은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어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한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 귀결이기도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을 크게 본 국민의 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15년 24.0%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면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이 사라진 자리를 절망과 체념이 채우면서 심각한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계층상승 사다리 기능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는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기제로 남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실 교육은 그간 진행된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이 외견상 매우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면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의 계층상승 사다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이 아닌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진정한 공정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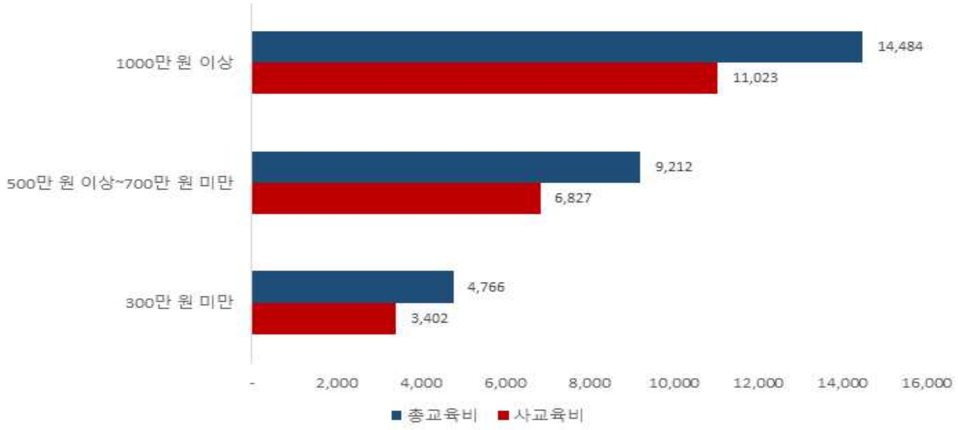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최근 교육격차가 심화한 배경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COVID-19가 계층 간 교육격차에 끼친 영향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교육격차의 실태

교육격차는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의 과정 및 여건, 교육결과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교육결과,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기회와 교육의 과정 및 여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에 기인한 교육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이 기득권 유지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매우 유용한 지렛대가 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몫을 크게 늘리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1]에는 2018년 신한은행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가구당 교육비는 영유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출한 자녀 1인당 교육비를 가리킨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총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수준이 300만 원 미만 집단은 71.3%이지만, 500~700만 원 미만 집단이 74.1%, 1000만 원 이상 집단은 76.1%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림 1] 소득수준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 현황

(자료: 신한은행(2018). 보통사람금융생활 보고서)

철저하게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사교육의 경우 교육의 질 측면에서 공교육보다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업성취가 결정되는 정도를 한층 확대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가 뛰어날수록 사교육 참여도 더욱 활발한 편이어서 사교육이 유발하는 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 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총액이 훨씬 많은 가운데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몫도 더 크면 고소득층 자녀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공교육 및 사교육 모두에서 훨씬 양질의 교육기회를 누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고소득층 자녀가 학업성취 및 교육성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능성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동시에 대학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수능성적이 어떠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수능성적에 따라 대학 진학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였다. <표 1>에는 최필선·민인식(2015)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수능성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 자녀의 수능성적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학생들의 경우 1~2 등급은 0.8%에 불과하지만, 7~9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54.0%에 달한다. 하지만 부모가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7~9 등급 비율은 16.6%에 불과하고 1~2 등급 비율은 20.8%에 달했다.

<표 1>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수능성적

(단위: %)

	7~9등급	5~6등급	3~4등급	1~2등급
고졸 미만	54.0	34.3	10.9	0.8
고졸	41.4	36.1	17.6	5.0
전문대/대졸 이상	16.6	29.8	30.5	20.8

*출처: 최필선 · 민인식(2015:43).

비슷한 맥락에서 김영철(2011)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수능등급 및 대학 진학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바 있다. <표 2>는 부모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수능등급 및 대학 진학 성과 간 관계를 보여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지위와 월평균 가구소득의 합성지표로 생성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수능등급 간 연관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능등급도 올라가지만, 앞서 제시했던 부모 교육수준과 자녀 수능성적 간 관계만큼 연관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이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상위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주요 9개 대학 및 의대 진학률에서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사실 9분위 집단과 비교할 때 10분위 집단은 수능등급에서는 우위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평판도가 높은 주요 대학 및 의대 진학률에서 10분위 집단은 9분위 집단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표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수능등급 및 대학 진학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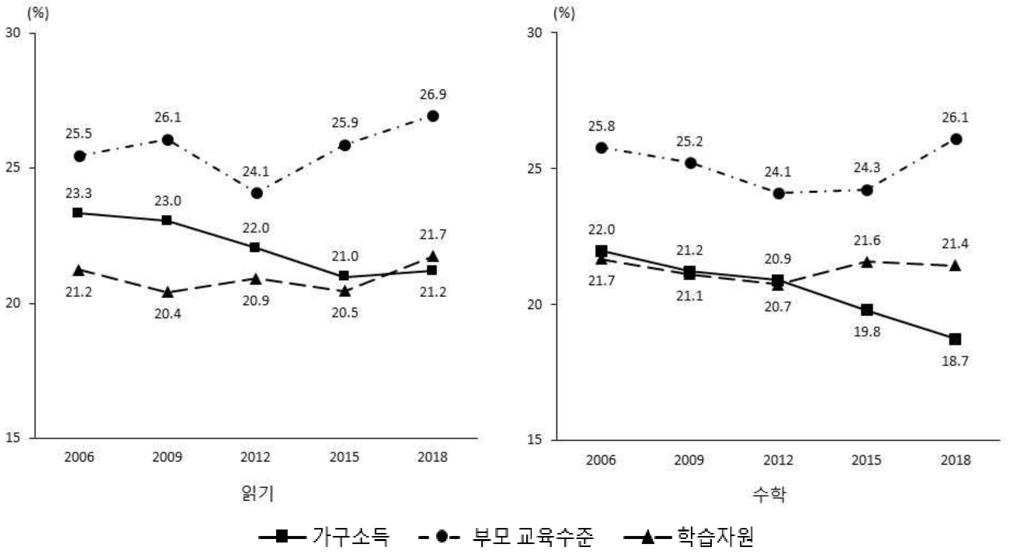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지위	수능등급	4년제 대학 진학률	주요 9개 대학 및 의대 진학률
10분위	4.3	74.5	13.8
9분위	4.8	75.8	6.3
8분위	4.9	64.7	2.5
7분위	5.2	74.3	5.0
6분위	5.5	61.3	0.7
5분위	5.8	52.2	0.0
4분위	5.7	49.3	0.7
3분위	5.6	34.2	2.5
2분위	5.4	45.7	0.0
1분위	5.6	33.8	0.8

*주: 1)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의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 월평균 가구소득의 합성지표임.
2) 주요 9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항공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임.
*출처: 김영철(2011:10)에서 추출하여 저자가 재구성.

이런 결과는 최상위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이 대학 진학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측건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세칭 명문대학 졸업장이나 높은 소득과 직업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전공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그것에 대한 집착도 그만큼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능성적에서는 두드러진 상대적 우위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성과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인 것은 유용한 입시 정보나 양질의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수들 가운데 특히 어떤 변수가 교육격차 심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사회경제적 배경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의 변화 추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학업탄력적 학생은 열악한 가정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배경을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취도에

도달한 학생을 가리킨다. 대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들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추정된 학업성취의 잔차가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학업탄력적 학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림 2]에서 각 변수별로 산출한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이 낮을수록 해당 변수가 학생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업탄력적 학생이 감소하면 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양호한 학업성취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학생이 증가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



*주: 1) 학습자원은 공부용 책상,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 학교 공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학교 공부에 참고할 수 있는 책, 전문 기술 서적, 사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2) 여기에서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은 가구소득, 부모 교육수준 및 학습자원별로 해당 변숫값이 각각 하위 25.0%에 해당하는 학생이 OECD가 정의한 경제사회문화 지위(ESCS) 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추정한 학업성취 잔차 상위 25%에 속하는 비율로 산출하였음. 경제사회문화 지위(ESCS) 지수는 부모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정 내 기본 설비 및 장치, 문화자산, 학습자원의 합성지표임.

[그림 2]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수별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 2006-2018

[그림 2]를 살펴보면 읽기 영역의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수 가운데 부모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극복하기 쉬운 요인인 반면, 학습자원이 빈약하거나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읽기 영역에서 학업탄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가구소득이 학업탄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향성이 좀 더 뚜렷해진다. 수학 영역의 경우에도 가구소득, 학습자원, 부모 교육수준 순으로 학업탄력성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 때 갈수록 학업탄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학 영역에서 낮은 가구소득이 학업탄력성에 강력한 부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수학 성취도가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김양분·김난옥, 2015).

읽기 및 수학 영역 모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구소득과 학업탄력성 간 연관성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반면 부모 교육수준이 학업탄력성에 끼치는 영향은 2012년 이후 점차 약해지고 있다. 기실 부모 교육수준이 학업탄력성에 끼치는 영향력은 모든 기간에서 가정 내 학습자원보다 현저하게 약했다. 이는 자녀가 원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가정 안팎에서 물심양면으로 세심하게 지원하기 어려울 때 학업탄력성의 발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그림 3]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주요 대학 및 의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나타나 있다. 서울시 8개 의대(의학, 치의학, 한의학 3개 학과 합산) 학생들 가운데 10분위 38%, 9분위 17%로 9·10분위 비율이 무려 55%에 달한다.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10분위 30%, 9분위 16%로 9·10분위 비율이 46% 로 나타났다. 반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10분위(12%), 9분위(13%)에 해당하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를 통해 위세가 높은 대학이나 선호도가 높은 전공일수록 고소득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19.11.16.).

*주: 1) 서울 8개 의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의 의학, 치의학, 한의학 3개 학과 합산임.

2) 소득분위는 부모의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1~10분위로 나뉘며(9분위: 903만~1355만원, 10분위: 1356만원 이상), 한국장학재단은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자료: 한국장학재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림 3] 주요 대학 및 의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Ⅲ. 교육격차 심화의 배경

앞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교육격차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격차 심화에 일조하고 있는 요인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교육지원 약화

한국 사회에는 다른 사회보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할 개연성이 큰 요인으로는 다른 사회에 비해 훨씬 두드러진 교육적 동질혼 경향을 들 수 있다. 교육적 동질혼이란 교육수준이 비슷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강고한 교육적 동질혼 경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풍족한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동원을 통해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누린 고학력·고소득 부모의 자녀들은 학업성취나 교육성취에서 확고한 이점을 갖게 되기 쉽다(박현준·김경근, 2012).

한편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에는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수준이나 배움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교육열이 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문민정부 이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간단없이 이어져 온 까닭에 소득 양극화는 이미 기울어져 있던 교육경쟁의 장을 한층 더 기울게 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만 2000원으로 소비지출 총액의 2.1%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소득 1분위 가구보다 22.9배나 많은 50만 4000원에 달하며 소비지출 총액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공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교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태에서 계층 간에 교육비 지출에서 이처럼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업성취가 결정되는 경향은 날로 심화할 수밖에 없다.

2)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종

사교육 문제의 해결 없이 교육격차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교육부마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이 난제이며 교육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수요는 제한적 기회구조와 개발연대기에 배태된 물질주의적 욕망 간 커다란 간극에 의해 추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욕망은 온존된 상태에서 기회구조가 큰 폭으로 악화함에 따라 낙오와 도태를 회피하려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승자와 패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승자에게 지나친 보상을 안기고 학벌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관행과 문화도 사교육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복지가 강화되고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지 않고는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교육부가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육부는 공교육의 부실에 기인한 사교육 수요의 유발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만연

한국인은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골몰하고 있다(박권일, 2021). 그런데 능력은 노력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우연이나 운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가정배경이 좋은 사람은 능력을 갖추는 데 절대적인 이점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이 능력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항상 최후의 승자가 될 공산이 크다(박남기, 2018).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난도 학업부진도 대부분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자신이 누린 행운에 대한 부채의식의 발로에서 삶의 출발선에서 자신보다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나 공공 기관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저런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Frank, 2017). 한국 사회가 바로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4) 종합적인 청사진 또는 로드맵의 미비

교육격차는 다양한 맥락과 배경에서 발생한다. 또한 교육격차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의 전 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아울러 교육격차는 공교육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격차의 전모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해소가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그간 시행된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은 상당히 분절적이고 대증요법적 성격이 강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은 면밀한 실태 파악과 증거를 기반으로 수립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여론의 향배나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도입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 시행됐던 정책을 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이식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때문에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5) 진영 논리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 훼손

저소득층 아동이 직면하는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 교육격차 문제는 특히 더 그렇다. 따라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이 빈곤 때문에 겪는 제반 어려움을 완화하는 교육복지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복지는 정권의 이념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진보정권에서는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교육복지가 상당히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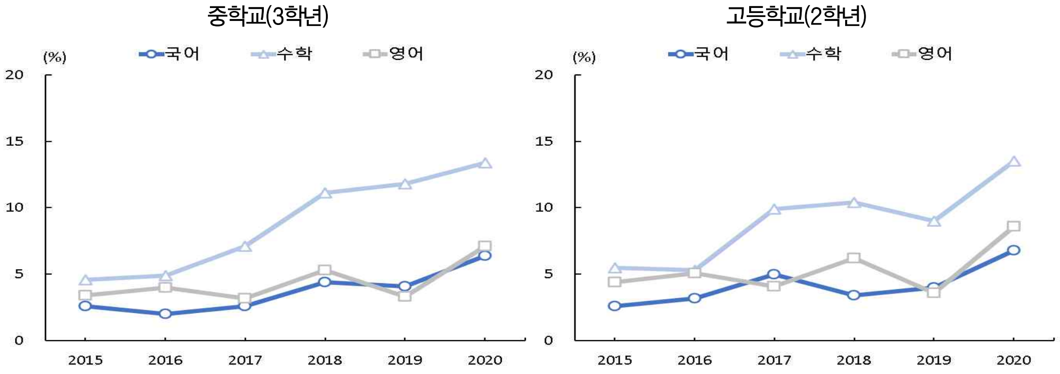
교육격차 해소가 중앙정부 수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다루어진 것은 참여정부 시기였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교육복지사업의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사업들도 상당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발표한 10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미미했다. 참여정부 시기에 비하면 교육격차가 훨씬 더 심화하였음에도 보수정권 시절의 타성과 무기력감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김경근, 2019).

Ⅳ. COVID-19와 교육격차 심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COVID-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교육격차가 크게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급증 및 학

력의 양극화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그림 4]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 추이가 과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요구되는 수준의 학력을 가리킨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학생들의 전반적 성취도가 낮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주: 1) 2017년도부터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그림 4]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5-2020

전체적으로 2020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영어와 수학은 COVID-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에서는 1.6%p 증가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4.5%p 증가했다.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급등했고, 중학교에서도 2019년 3.3%에서 2020년 7.1%로 3.8%p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초래한 결과로 읽힌다. COVID-19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 부진에 빠졌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한편 COVID-19는 전례 없는 학력의 양극화도 초래했다. 정송·안영은(2021)이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을 받은 서울 시내 중학생의 수학 중위권이 14.9%p 감소했다. 중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하위권보다는 상위권으로 더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중등교육에서 수업은 중위권 학생들을 겨냥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극화한 성적분포는 수업 진행과 관련해 교사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긴 셈이다. 중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위권으로 이동한 사실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기간에 사교육의 위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등교수업이 어려운 기간에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학력 격차는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다.

Ⅴ. 맺음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잡계적 성격을 지닌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주요 정책들 사이의 우선순위,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먼저 공략해야 할 맥점, 소요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고찰한 교육격차의 실태, 교육격차의 배경 등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기득권층 관점에 기반한 기계적 능력주의 및 공정성 논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결과의 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의 개편을 고려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획득한 성적이건 무조건 높은 성적을 제출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관행과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수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배경특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교육이 대입전형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정책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적절한 예고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개입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적절한 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 아동의 기초학력 신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개별화 및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이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 학생 중 교과 성적이 뛰어난 집단과 교과 성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월성을 지닌 집단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과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과 성적에서 강점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훌륭한 역할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동기부여에 필요한 역할모델을 발견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러한 현상이 타개되어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도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저소득층 가운데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양호한 학업성취에 도달한 학생들이 늘어나게 하려면 복지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의 강화로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면 학업탄력적 학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근·심재휘, 2019). 능력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상당히 저항과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소득 양극화 때문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이 나름대로 예전의 교육열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OVID-19 사태가 교육격차를 한층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사태가 초래한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실상을 적확하게 파악하여 적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는 곳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근(2019). '교육격차 해소.'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한국행정연구원(편), 576-607.

김경근·심재휘(2019).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추이 및 근인. 교육사회학연구, 29(4): 37-64.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한국개발연구원.

김양분·김난옥(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박권일(2021).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서울: 이데아.

박남기(2018). 실력의 배신: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불행한가?. 파주: ㈜쌤앤파커스.

박현준·김경근(2012). 한국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분석: 1966-2010. 교육사회학연구, 22(4), 113-139.

신한은행(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18. 서울: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정송·안영은(2021). 코론나19 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2): 53-74..

중앙일보(2019.11.16.). SKY 학생 절반이 그들···'교육 귀족'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34196(검색일, 2021.10.4.)

최필선·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2): 31-56.

통계청(2020).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년 5월 7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2017).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안과 과제 17-9.

Frank, R. H.(2017). Success and luck: Good fortune and the myth of meritocr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